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40
----------	-------

발의연월일 : 2025. 6. 11.

발 의 자 : 전진속 · 김용만 · 이수진
남인순 · 박지원 · 박해철
서미화 · 김문수 · 권향엽
김 윤 · 정혜경 · 전종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비밀 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사례 분석을 지원할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부터 제4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8(가정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하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 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사망사건등 통계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 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사망사건등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권고에 관한 사항
4. 가정폭력사망사건등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제4조의9(가정폭력사망사건등 관련 자료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및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형사사법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얻은 정보나 자료를 제4조의10에 따른 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대한 조사·분석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10(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정책, 제도 및 제4조의8에 따른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2.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3. 제5조에 따른 상담소 또는 제7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사자
 4. 사회복지사 또는 가정폭력 담당 공무원
 5. 의료기관 종사자
 6. 그 밖에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그 밖에 검토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대한 발생 원인 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전의 제3호) 중 “제16조에”를 “제4조의9제3항 또는 제16조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4조의8(가정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하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p> <p><u>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u></p> <p><u>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정폭력 사망사건등의 사례 분석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u>1. 가정폭력사망사건등 통계에 관한 사항</u></p> <p><u>2.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u></p>

<신 설>

분석 결과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사망사건등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권고에 관한 사항

4. 가정폭력사망사건등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제4조의9(가정폭력사망사건등 관련 자료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및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형사사법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얻은 정보나 자료를 제4조의10에 따른 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③ 가정폭력사망사건등에 대한 조사·분석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10(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정책, 제도 및 제4조의8에 따른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2.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3. 제5조에 따른 상담소 또는 제7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중

	<u>사자</u> <u>4. 사회복지사 또는 가정폭력</u> <u>담당 공무원</u> <u>5. 의료기관 종사자</u> <u>6. 그 밖에 가정폭력사망사건등</u> <u>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u>④ 그 밖에 검토위원회의 구성</u> <u>·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u> <u>사망사건등에 대한 발생 원인</u> <u>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 <u>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u> <u>할 수 있다.</u>
제20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16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1. 제4조의9제3항 또는 제16조 에-----